

노동정책연구

2002. 제2권 제1호 pp.109~123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

박영구\*\*

본 연구는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부산지역 경제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기존의 산업구조 중심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찾아내 보기 위한 시도로 부산지역 인적자원의 현황과 활용도 그리고 노동시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역경제로서의 부산지역 노동시장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찾아내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정책의 대안적 시각을 제시해 보고 있다.

핵심용어 : 부산, 지역노동시장, 인적자원, 지역노동정책

## I. 서론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지역과 서울과의 경제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서울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결국 오늘날 한국 경제가 물어야 할 가장 고비용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부산은 그 중에서도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유지해 왔다. 특히 국민고통의 가장 큰 체감지표가 될 수 있는 실업률은 항상 부산이 가장 높았으며 1999년 9.1%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01년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산 경제의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항상 지역, 부산의 산업구조 문

투고일: 2001년 11월 26일, 심사의뢰일: 2002년 1월 24일, 심사완료일 2월 16일.

\*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이승렬 박사님, 부산시의 주수현 박사님께 감사 드린다. 본 연구의 일부분과 일부 자료는 공동연구인 지역경제혁신 연구의 저자담당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parkyg@pufs.ac.kr).

제와 자본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되면서 연구되어 왔고 신자본으로서의 인적자원과 노동시장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사실 경제성장과 인적자원의 높은 상관성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지역경제의 문제를 이런 지역노동시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적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지역자치기구를 보면 많은 발전된 경험과 관련기구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적자원 및 고용정책은 중앙에서 결정된 방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고 지역의 독자적인 연구나 시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20세기 후반 들어 선진지역에서는 이러한 점이 수정되고 있었다. 세계의 우수 인적자원을 가장 많이 유치함으로써 20세기의 세계화를 주도해 온 미국은 물론이고 성장과 안정을 구가하는 세계 주요 지역들의 공통점은 전부 인적자원과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 정책이 발전한 지역이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자본을 찾아 노동력의 대이동이 전개되었던 20세기 중반까지의 일반적 형태가 바뀌어, 우수한 인력이 있는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결국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 디지털경제,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지리적 제약이 현저히 극복되면서 점점 더 자본과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는 인적자원을 따라 만들어지고 이동함에 따라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한 곳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 곳은 산업공동화의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필요성과 현실 속에서 한국의 지역시장을 대표하면서도 가장 고통수도가 높은 부산지역의 장기적 경제 문제를 고려하는 한 시각의 전환으로서, 기존의 산업구조나 자본이 아닌, 부산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본고의 본격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걸어서 간단히 부산지역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한 시각을 제시하고 부산 경제의 활로에 대한 함의점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부산지역 인적자원의 현황과 활용도

본고에서는 현재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구, 인천 등 다른 주요 대도시와의 비교도 염두에 두되, 기본적으로는 정량적 비교를 위한 일차적 대상, 따라서 비교표 작성

1) J. Benhabib and M. M. Spiegel(1994). J. Temple(1999). Y. G. Park(2000). 이은우(2001).

의 일차적 대상으로 서울을 선택한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기본적인 비교 기준을 전국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전국 평균을 대도시로서의 부산과 비교한다는 것은 산업구조나 규모, 인구 구성 등 경제적인 면에서 의미가 없고 둘째, 전국에는 이미 부산이 포함되어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을 일차적 정량비교의 대상으로 한 것은 서울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표 도시라는 점과, 지면과 시각적 편의성이라는 비교기술상의 문제, 그리고 향후 부산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이라는 본고의 동태적 변화 방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제 부산지역의 인적자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인구추이를 총인구와 남녀 구성별로 구분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성별·종합별 지역인구

(단위 : 명)

	1985	1990	1995	2000
부산시	3,514,798	3,798,113	3,814,325	3,662,884
여자	1,778,422	1,916,187	1,913,806	1,835,822
여성비	0.5060	0.5045	0.5017	0.5012
서울시	9,639,110	10,612,577	10,231,217	9,895,217
여자	4,844,024	5,286,236	5,092,282	4,928,224
여성비	0.5025	0.4981	0.4977	0.4980
대구시	2,029,853	2,229,040	2,449,420	2,480,578
여자	1,024,489	1,115,798	1,215,708	1,233,016
여성비	0.5047	0.5006	0.4963	0.4971
인천시	1,386,911	1,817,919	2,308,188	2,475,139
여자	694,395	902,840	1,142,028	1,224,756
여성비	0.5007	0.4966	0.4948	0.4948

주 : 행정구역, 성, 가구종류별 총조사인구.

자료 : 통계청, 2002. 2.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산시의 인구가 최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매년 추계된 부산시의 인구는 1991년 이후 예외적으로 증가한 1995년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물론 서울 역시 감소했으나 이는 1990년대 신도시 건설과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라는 수도권 팽창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성격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실질적으로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정체된 2000년에는 전년 대비 서울의 인구가 늘어났다. 산업구조상 부산과

유사하게 대비하여 볼 수 있는 대구도 최근 15년간 22%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여 이미 1997년 이후 주민등록인구로 250만 명을 돌파하였다. 대구, 인천과 함께 5대 광역도시인 광주, 대전도 전부 1990~2000년간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부산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대도시 중에서 인구감소 도시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산업구조가 문제가 되어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 동일한 산업구조를 겪고 있는 대구 등 다른 도시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도시와도 차별적인 특징이라는 점에서 이는 부산 지역경제 위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부산 지역경제 위기의 원인일 수도 있다. 대구의 인구 급증 예에서 보듯이 이론상으로도 노동집약적산업이 남아 있는 경우 산업구조, 도시소득 증가율과 상관없이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인구 유출 측면에서 2000년에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가장 많았던 시도는 부산이었고 전남, 전북이 뒤를 이었다.<sup>2)</sup> 지역인력 순유출은 결국 공급애로에 따른 한계로 나타날 것이고 부산 경제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정도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해 단순노동력 부족분만을 고려해도 지역총생산의 5~6%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둘째, <표 1>에서 보듯이 부산 인적자원의 현황을 남녀 구성비로 보면 부산은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력이 부존요소 우위에 있는 도시라는 점이다. 물론 자연성비란 큰 차이를 갖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부산의 경우 인구 구성에서 분명히 여성 인구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여성이 더 많은 도시이다. 대도시일수록, 경공업구조가 강할수록 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은 존재한다. 그러나 부산을 제외하고 대구, 인천 등 타 대도시에서 모두 남자가 많고, 서울의 경우도 1990년 이후 남성의 비율이 더 높으며, 섬유공업지대라는 지역공업 구조상 여성 우위의 사회적 인구 증가가 당연시되었던 대구까지도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올수록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지역의 발전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자원을 잘 활용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산의 여성 인력 활용문제는 부산의 경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박영구, 200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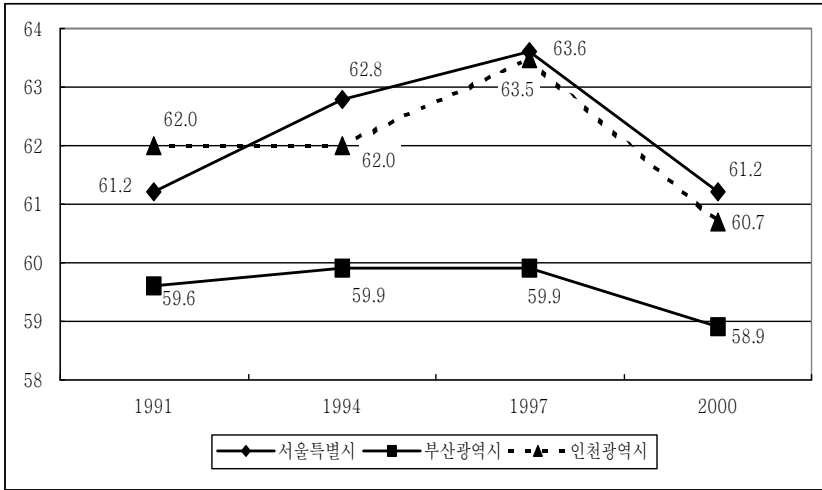
부산의 인적자원 활용도를 보기 위해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부산은 2000년 58.9%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6%, 60.9%로 높아졌는데 비해 부산만 58.4%로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오히려 더 낮아졌다(통계청, 2002. 2. 노동부, 2002. 1.).

특히 부산지역의 인적자원 활용 문제점은 질적인 면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2) 통계청, 「2000년 인구이동 집계결과」, 2001. 4. 10.

3) 한국경영자총협회(1995).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2002. 2. 노동부, 2002. 1.

나타나는 최근의 특징은 인력의 고학력화이며 고학력은 인력의 질로 연결된다. 정보화 시대로 갈수록 인력대체효과는 제한적인 데 비해 보다 ‘조직적인 보완관계’의 필요와 발전으로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있다(T. F. Bresnahan, 1999). 그러나 학력별로 부산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를 서울과 비교하여 정리하여 보면(표 2) 이런 점에서 부산의 심각성은 분명히 나타난다.

<표 2>를 보면 서울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에서 1990년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은 21.7%, 21.6%였으나 1995년 29.6%, 28.0% 그리고 2000년에는 32.1%, 32.4%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이 비율이 1990년 14.0%, 13.8%에서 2000년에 23.2%, 23.4%에 불과하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1990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은 7.1%포인트, 7.1%포인트 차이였으나 2000년에는 9.6%포인트, 9.6%포인트 격차로 확대되었다. 2001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 대졸자의 비율은 부산이 15.0%, 15.2%로 전체 취업자의 7분의 1 수준인 반면 서울은 25.5%, 25.8%의 4분의 1인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2001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을 대구와 비교해 보아도 부산은 23.7%, 23.7%인 반면 대구는 26.8%, 26.9%로 그 격차가 3.1%포인트, 3.2%포인트가 되어 2000년의 2.7%포인트, 2.4%포인트에 비해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었다(통계청, 2002. 2. 노동부, 2002. 1.).

〈표 2〉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학력별 비율(%)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부산	서울	부산	서울
중졸 이하	1990	41.7	31.8	42.2	32.3
	1995	34.0	24.3	34.4	24.5
	2000	28.8	22.8	28.7	22.9
고 졸	1990	44.3	46.5	44.0	46.1
	1995	46.7	47.7	46.6	47.5
	2000	48.0	45.1	48.0	44.8
전문대졸	1990	3.5	4.1	3.4	4.1
	1995	5.8	5.6	5.6	5.6
	2000	8.0	7.3	7.8	7.2
대 졸	1990	10.5	17.6	10.4	17.5
	1995	13.5	22.3	13.4	22.4
	2000	15.2	24.8	15.6	25.2

자료: 통계청, 2001. 7. 노동부, 2001. 8.

부산지역에서 나타나는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에서 나타나는 낮은 고학력자 비율은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부산지역이 지역인적자원을 총량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지역의 다수 고학력 기관과 고학력 졸업자를 볼 때<sup>4)</sup> 공급 면에서도 지역인력들이, 특히 고급인력들이 여전히 지역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을 노동공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sup>5)</sup> 우선 부산지역의 경우 직업탐색비용(job search cost)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업에 관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서울지역에 대한 정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울에 비해 부산이나 기타 지역의 경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방문하기를 요구하는 빈도가 높다. 나아가 인터넷, 전화 등 통신과 직접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어도 정보량을 매우 적게, 불확실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일차적으로 부산지역 노동 수요처의 영세성에 기인하며 지역성에도 원인이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

4) 전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100으로 할 때 대학생수는 서울이 116.9인 데 비해 부산은 118.3으로 더 높다(유병규·김광철, 2001; 한국교육개발원, 2001).

5) 이는 필자가 부산외국어대학교 취업정보실장과 부산광역시 노동고용위원으로 있으면서 2000~2001년 2년간 구한 실질면담 자료에 나타난 원인이다. 이 두 가지는 단독 혹은 중복적 이유 제시에서 절대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로는 지역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가졌을 때 잃게 되는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 즉, 육아비용, 자녀 및 본인의 교육 기회 및 손실, 문화활동 접근비용 상승 등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비용과 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결정적으로 노동공급자의 노동공급지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나타나는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고학력자의 낮은 비율 그리고 이것의 원인과 의미하는 두 가지 사실은 부산지역의 문제가 기존에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산업구조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Ⅲ.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

지역시장으로서의 부산지역 노동시장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보다 비교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서울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자. 물론 이러한 부산 노동시장의 특징은 다른 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특징과 중복되어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인구 400만 명에 이르는 부산은 최소한 1.5배 이상의 그 규모로 인한 수요, 경제과급효과에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이러한 특징이 차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첫째, 세계적으로 인력의 전문화가 진행되는 데 비해 부산의 경우 이러한 전문화 현상이 지체되거나 오히려 동태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부산의 경우 가장 뒤떨어져 있는 인력계층이 인적자원의 핵심인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계층, 그리고 전문가 계층이다. 서울과 비교해 보면 2000년 서울의 경우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계층이 전체 취업자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이 비율은 불과 9.0%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격차가 1994년 5.4%포인트에서 1997년 6.9%포인트, 그리고 2000년에는 8.9%포인트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 계층도 서울의 7.3%에 비해 부산의 경우 5.0%로 그 격차가 1990대 후반 개선되고 있지 않다. 반면 부산의 경우 기술, 전문가 이외의 기능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단순 장치·기계 조작, 조립원 비율이 1994년 16.7%에서 1995, 1996년 9.6~9.5%로 줄었다가 다시 1997년 이후 9.9%, 10.4%, 10.7% 그리고 12.3%로 급증하고 있다.

둘째, 부산의 경우 연령별 구조에서 학습 속도가 빠르고 최근의 빠른 기술 변화를 잘 수용하는 20~30대 전반기까지의 젊은 인구층 비율이 매우 낮다. 물론 이 현상은 젊은이들의 서울 선호가 높은 우리 나라의 지역노동시장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지만, 부산의 차별성이나 심각성은 부산 역시 인구 38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고 대학과 대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표 3> 직종 기능에 따른 직업별 취업자 비율 비교(%)

	1994		1997		2000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서울
전문가	3.8	6.4	4.1	6.4	5.0	7.3
기술공 및 준전문가	7.4	13.8	9.4	16.3	9.0	17.9
사무직원	13.6	16.8	12.1	15.8	11.1	1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17.2	13.0	20.4	15.2	19.1	15.4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6.7	11.2	9.9	7.0	12.3	5.9
단순노무직근로자	12.3	9.8	12.7	9.7	12.5	10.0

주 : 입법공무원, 고위직, 1차산업 근로자 등이 빠져 합계가 100% 안 됨.

자료 : 통계청, 2001. 노동부, 2001. 8.

<표 4>는 이러한 부산의 노동시장 특징을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부산의 경우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뒤져 있고 40대 이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뚜렷이 발견된다. 기술진보가 느릴 때는 고연령의 숙련직, 애사심이 더욱 효율적이지만 기술진보가 빠른 노동시장에서는 젊은 연령층 인구가 많을수록 효율적이다. 특히 최근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라 기술습득, 따라서 경쟁력에 중요한 25~34세까지의 취업자 비율이 2001년 서울의 경우 29.7%인 데 비해 부산은 24.8%이다(통계청, 2002. 2. 노동부, 2002. 1.).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산의 1991년 25~34세 취업자 비율은 29.2%였으나 2000년에는 25.4%, 2001년에는 24.8%로 줄어들고 있다.

<표 4> 취업인구의 연령별 비율(%)

	1991		1994		1997		2000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서울
15 ~ 19세	4.5	3.9	2.3	2.6	2.1	2.0	2.1	2.1
20 ~ 24세	11.7	13.7	11.0	13.1	9.7	10.8	7.8	8.8
25 ~ 29세	13.4	16.3	12.3	15.8	12.4	17.1	13.0	16.0
30 ~ 34세	15.8	16.0	13.4	16.5	10.9	14.5	12.4	14.2
35 ~ 39세	14.4	13.2	16.5	15.1	14.0	14.5	13.7	14.4
40 ~ 44세	12.5	11.9	13.5	11.3	15.6	12.6	15.0	13.8
45 ~ 49세	10.7	9.8	11.1	9.4	12.4	9.6	12.4	10.9
50세 이상	16.7	15.2	19.7	16.2	23.0	18.8	23.4	19.9

자료 : 통계청, 2001. 7. 노동부, 2001. 8.



유능한 신규 진입자의 공급부족은 결국 임금상승으로 나타나고(D. Card & T. Lemieux, 2001) 나아가 지역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부산의 경우 높은 임금을 주어도 젊은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이는 지역경쟁력에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6)

셋째, 부산의 경우 비교우위 자원으로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특히 낮고 또 그 개선율이 낮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정리해 보면(표 5) 부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9~47.2%로 남성의 71.8~73.5%에 비해 매우 낮다. 앞서 부산이 2001년에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신장한 데 비해 부산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실질적으로 2001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울이 0.7%포인트, 대구가 1.4%포인트, 인천이 0.6%포인트, 광주가 1.7%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부산만 0.2%포인트 하락했다(통계청, 2002. 2. 노동부, 2002. 1.).

〈표 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1991	1994	1997	2000
부산광역시	59.6	59.9	59.9	58.9
남 자	73.5	74.2	71.8	72.0
여 자	47.2	46.9	48.9	46.9
서울특별시	61.2	62.8	63.6	61.2
남 자	76	78.5	77.8	74.6
여 자	47.3	48.2	50.3	48.5

자료 : 통계청, 2001. 7. 노동부, 200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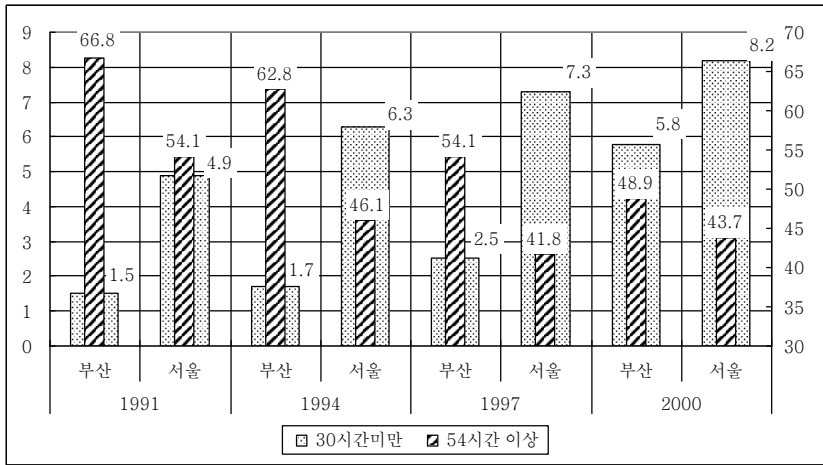
그 결과 전국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부산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서울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1991년 0.1%포인트에서 1994년 1.3%포인트, 2000년 1.6%포인트로 늘어나고 있다. 2001년 중에는 오히려 서울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남성 격차보다 더 커지는 현상까지 나타났고(박영구, 2001b) 그 격차가 2.5%포인트로 더욱 확대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지역경제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부산은 여성 노동력이 상대적

6) 부산시 경영자들을 면담한 결과 고급 젊은 인력의 부족으로 부산 벤처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젊은 경영자일수록 이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우위에 있는 도시이므로 이는 바로 부산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부산의 경우 노동시장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긴 노동시장의 전통적인 경직성이 발견된다. 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을 정리한 [그림 2]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나타나듯이 부산의 경우 54시간 이상 근로자는 48.9%로 서울의 43.7%보다 높다. 그러나 1일 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5.8%로 서울의 8.2%에 비해 낮다. 2001년에도 이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 통계는 전통적으로 부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어 왔지만, 사실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노동시장 참가 주체들의 선호도 변화, 노동시장의 다양성, 근무형태의 변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하면 변하지 않는 부산의 전통적인 노동시장 경직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sup>7)</sup> 최근 부산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이런 변화를 반영해 30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이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서울,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sup>8)</sup>

[그림 2] 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



자료 : 통계청, 2001. 7. 노동부, 2001. 8.

이렇게 노동시간의 경직성이 크면 결국 가사노동이나 자기계발에 보다 높은 효율을 두는 여성과 고급인력들은 기회비용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다음의

- 7) 3차산업 구성이 높은 지역의 노동시간은 더 길지만 2000년 서울의 3차산업 인구 비중이 80.7%로 부산의 73.0%보다 더 높으므로(통계청, 2001. 7) 이 변수 역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8) OECD 국가들의 단시간(part-time) 근로자 비율은 1989~99년간 13.9%에서 15.6%로 늘어났고 유럽연합(EU) 15개 국가 역시 동 기간 13.0%에서 16.2%로 늘어났다(OECD, 2000a, 2000b).

식 및 [그림 3]에서 보듯이 이들에게는 주관적인 심각한 효용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개인의 총시간  $T=L+R$  ( $L$ : 직장 노동시간,  $R$ : 직장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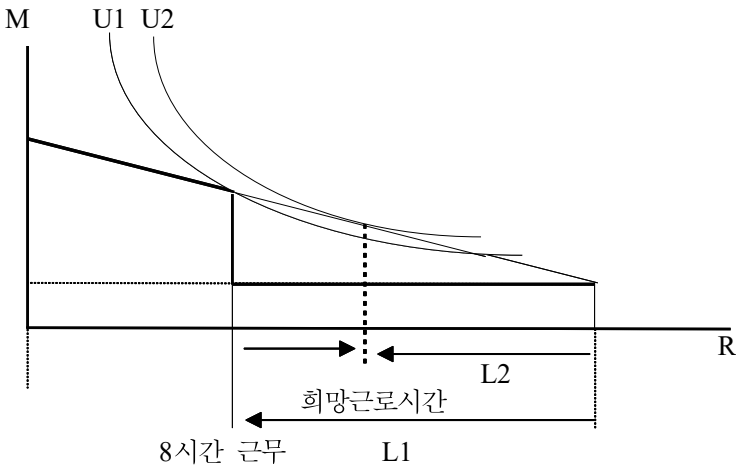
$w$ 를 시간당 임금(암묵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wT = wL + wR$$

$$= M + wR \quad (M: \text{직장근로소득})$$

$$\therefore M = -wR + wT$$

[그림 3] 취업시간 융통성에 따른 효용과 경제활동 변화



결국 이들 인력들은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거나<sup>9)</sup> 혹은 덜 경직적인 제도가 많은 지역인 서울 및 해외로 떠나게 된다. 즉 부산의 이러한 노동시장 특징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학력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부산의 노동시장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전통적 직업탐색이론과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완정성은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나 마찰에 따른 높은 정보비용으로부터 나온다. 그 결과 직업탐색이론과 달리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은 막연히 한 번 이상 직장제의를 거절하거나 혹은 불안감에서 자신들이 정해 놓은 임금(asking wage)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더라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D. M. Blau &

9) 이 점은 실증적인 조사에서 확인된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서 퇴출 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L자형 커브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우란, 2001).

P. K. Robinson, 1990).

문제는 부산의 경우 이러한 정보의 불완전성이 매우 커서 주요 인력들이 정보비용 때문에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거나 혹은 정보비용이 낮다고 믿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부산의 경우 앞에서 지적인 2년간의 노동공급자 면담 결과와 함께 신발산업 실직자들의 재취업 형태 2차 실증조사<sup>10)</sup>의 다음 결과는 부산의 노동시장 정보가 매우 불완전하고 정보비용이 높음을 보여준다.

- ① 채용된 루트는 친구·친척을 통한 구직이 66.8%이고, 모집광고를 통해 채용된 경우는 9.5%에 불과하다.
- ② 재취업자의 1년 내 2번 이상 직장 재이동이 27.2%, 3번 이상 재이동도 11.1%이다. 2번 이상 재이동자 중 전문대 이상자가 75.0%이다.
- ③ 재취업했으면서도 직업탐색 계속의도를 가진 취업자 비율은 전 연령층에서 40.0% 이상이며, 모든 학력에서 역시 40.0% 이상이고, 경력별로 20년 이상자도 62.5%, 11~20년 경력자도 40.0%이다.
- ④ 2년 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실직자의 구직 시도 업체수는 4개 사 이상이 3.2%에서 36.5%로 대폭 늘었다.
- ⑤ 2년 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구직자가 취업 후 1년 이내에 이동한 업체수 중 1개 사는 1차 조사에서 57.4%이던 것이 오히려 28.6%로 줄어들고 4개 사 이상이 1.5%에서 21.3%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2번은 고학력자들조차도 정보 취득기회가 매우 빈약함을 보여주며 3번은 연령, 학력, 경력에 상관없이 노동시장 정보와 이동경로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데, 재취업자라는 모집단의 성격은 이런 주장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나아가 2년의 시차를 두고 실시한 2차 조사 결과인 4, 5번은 동태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제약성이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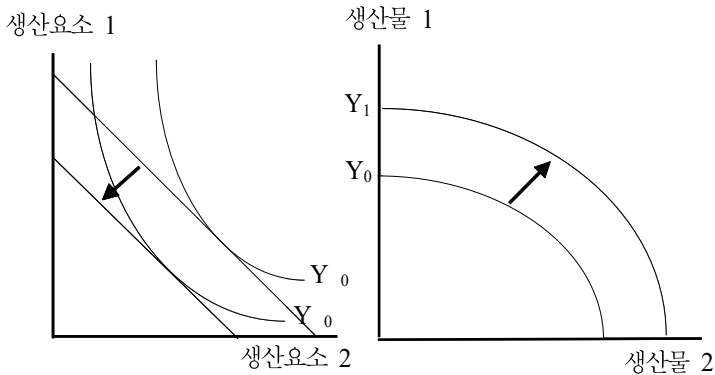
이상의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은 부산의 성장, 경제 문제가 인적자원, 노동시장 문제와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해 준다.

10) 임정덕·김완표(1996; 9~10, 45, 48~49, 58~60). 임정덕·김완표(1998: 41, 46).

## IV. 결어: 지역정책의 시각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쟁력 향상은 동일 생산량하의 비용감소를 위한 생산 제약조건의 완화나 동일 비용하의 생산가능곡선의 확대로 나타난다.

[그림 4] 지역경제의 진보와 경쟁력 향상



1. 단일생산량.

$$Y_{01}(\text{생산요소 } 1_{01}, \text{생산요소 } 2_{01}) = Y_{02}(\text{생산요소 } 1_{02}, \text{생산요소 } 2_{02})$$

2. 생산요소 사용량.

$$\text{생산요소 } 1_{01} \geq \text{생산요소 } 1_{02}, \text{생산요소 } 2_{01} \geq \text{생산요소 } 2_{02}$$

3. 생산물 1, 2의 생산가능곡선:  $Y_0(C_0) < Y_1(C_1)$

4. C(생산비용):  $C_0(Y_0) = C_1(Y_1)$

이를 위한 정책은 다음의 것이 된다.

- ① 숙련도나 기술 수준을 높인다.
- ② 정보, 탐색, 마찰 등 제반 거래비용을 줄인다.
- ③ 지역이 가진 특정 병목 요인을 제거하여 대체가능한 효율적 생산요소의 활용을 높인다.

앞에서 고찰한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상의 정책조건을 만족시키

는 중심전략은 인력유치, 인력육성, 인력활용을 종합하는 지역 인력네트워크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우선, 내용에서 볼 때 인력네트워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첨단지향산업도 중요하지만, 부산 지역경제에 현실적으로 또한 미래 전략적으로 분명히 차별되어 존재하는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의 이원화 구조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부산지역은 여전히 경제활동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향후에도 비교우위가 있는 전통적인 공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sup>11)</sup> 이런 인력과 산업의 이원화 구조를 단기와 중장기의 단계별 전략 속에 종합하여 인력의 유출 방지와 적극적인 유치, 산학연계 인력육성과 재교육, 인력교류, 인력재배치, 공동인력풀 시스템의 인력네트워크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네트워크의 주체 면에서 볼 때 우선 지방정부는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요집단과 기능집단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장 낮은 거래비용으로 모든 정보 수요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미래의 모든 인력정보를 그때그때 산업계, 구직자,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이론)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산처럼 필요인력이 부족한 곳일수록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선행적인 필수조건이다.

셋째, 지리적 범위에서 볼 때, 인력네트워크는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부산이 아니라 통근시간 등 보다 경제적 의미에서 경제활동권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밸리나 (이상일, 2000) 일본의 주요 경제지역을 보아도 인적자원개발 활동은 행정단위 구역보다 통학, 통근시간 또는 거리를 감안한 경제활동권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성공했다.

## 참고문헌

- 강우란. 『여성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삼성경제연구소, 2000.
- 박영구. 「부산지역 경제와 여성고용」. 부산광역시, 『시정연구』 13권 (2001. 1): 55-84. (a)
- \_\_\_\_\_. 「부산 실업, 고용 문제의 인식과 대안적 한 시각」, 한국지역사회학회 월례발표회, 2001: 21 (b)

11) 신발산업도 너무 일찍 사양산업으로 매도함으로써 부산은 고비용을 지불했다. 창업투자사, 엔젤클럽, 엔젤조합 등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첨단공업에서 중요한 최신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유는 현재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지방은 지방특화산업이 중요하다.

- 유병규·신광철. 『지역별 지식혁신능력 현황과 제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1.
- 이상일. 『실리콘 벨리의 인적자원 개발』.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이은우.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경제학논집』 10권 1호(2001. 6): 97-110.
- 임정덕·김완표.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 및 이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지역노동시장연구』 95권 2호(1996. 3).
- 임정덕·김완표. 「산업구조 조정기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 『노동경제론집』 21권 1호(1998. 6): 31-50.
- 통계청. 「2000년 인구이동 집계결과」. 2001. 4.
- 통계청 부산통계사무소. 「고용통계」. 2001.5~2002. 2.
- 한국교육개발원. 『2000 교육통계편람』, 2001.
- 한국경영자총협회.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개선방향』. 1995.
- Benhabib, Jess and Mark M., Spiegel.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Aggregate Cross-Countr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 (2) (October 1994): 143-173.
- Blau, David M. and K. Robinson, Phillip. “Job 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Unemploy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3) (June 1990): 637-655.
- Bresnahan, Timothy F. “Computerisation and Wage Dispersion: an Analytical Reinterpretation”. *The Economic Journal: the Journal of the Royal Economic Socie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09 (456) (June 1999): 390-415.
- Card, David and Thomas, Lemieux.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Based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2) (May 2001): 705-746.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79-1999*. Paris: OECD, 2000.
-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2000.
- Temple, Jonathan. “A Positive Effect of Human Capital on Growth”. *Economics Letters* 65 (1) (October 1999): 131-134.